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피해자 명예회복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8월 14일은 열 세 번째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입니다. 2012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김학순 할머니의 첫 번째 공개 증언을 기려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힘과 용기를 기리기 위한 기림일은 2017년 12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통과로 국가기념일로도 지정됐습니다.

지난 2월 김원옥 할머니, 5월 이옥선 할머니께서 소천하신 후,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단 여섯 분만이 생존해계십니다. 일제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지 올해로 80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지 34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는 없었습니다. “나라는 해방됐지만 우리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다” 고 하신 김복동 할머니의 절규가 다시금 아프게 다가옵니다.

피해생존자들의 용기있는 증언은 일제의 전쟁범죄를 전 세계에 고발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류 보편의 인권문제로 만들었고, 전시성폭력 근절 운동으로 확장시켰습니다. 국제사회와 세계시민들은 피해생존자들의 외침에 공명하며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과 평화의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 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세워지며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수 십 년간 전쟁범죄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방해하고, 철거에 외교력을 쏟으며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지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이 또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역사부정·왜곡 행태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외교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이를 틈타 극우 역사왜곡 세력들에 의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테러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요시위에 대한 모욕 행태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역사 부정·왜곡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이 같은 전쟁범죄의 재발 방지와 전시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소녀상 등에 대한 모욕 등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 위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회복에 앞장설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법’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확대·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를 회복해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퇴행시킨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다시 강화시킬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해야 합니다. 전국여성위원회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여성인권 증진,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멈춤없이 달려가겠습니다.

2025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 이수진)